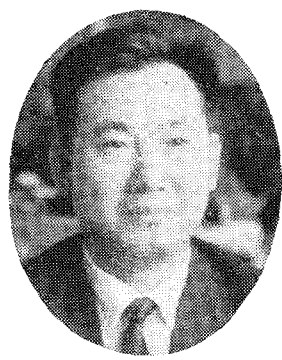


高度成長政策의 諸條件



東亞日報·論說委員 李 甲 燮

基本的諸條件

한국경제를 將次 어떠한 모습으로 發展시켜야 하나 하는 問題를 여기서 새삼스럽게 論할 餘地가 있을런지 모르겠다. 이 問題는 이미 너무나 많이 論究되었고 導出된 結論과 命題는 거의 常識化되다시피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問題가 지닌 重要性은 常識化되다시피한 結論 또는 命題를 再吟味할 必要性을 갖는것이 아닌가 싶다.

흔히 말하는 命題가운데 基本的인 것을 몇가지여기서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우리나라는 후진성과 빈곤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 高度成長을 追求해야 한다.
- ② 高度成長을 期하기 위해서는 높은 投資率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國內貯蓄率과 海外貯蓄率을 達成하여야 한다.
- ③ 그러나 高度成長은 安定의 基調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國民의 經濟的厚生을 向上시키는 것이라야 한다(現實은 이와같은 要求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 ④ 高度成長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農業開發보다도 工業化의 過程에서 더욱 注力하여야 한다. 農業보다도 工業部門에서 投資의 限界效率이 높기 때문이다.
- ⑤ 工業化는, 한편에서는 重化學工業의 發展이 強調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資本節約的·勞動力吸收的인 中小企業의 保護育成이 力說되는 局面을 갖는것이나 現實의으로는 消費財產業爲主로 追求되는 傾向이 짙고 또 이를 不可避한 것으로 看做하는 경우가 많다.
- ⑥ 工業化를 위한 市場確保의 한 方便으로서 工業化를 위한 外貨調達의 한方法으로서 그리고 經濟的自立도를 높이기 위해서 輸出增大가 무엇보다도 積極 追求되어야 한다.
- ⑦ 輸出增大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產業의 條件으로 보아 勞動集約的인 生産物 즉 農水産物과 初步的工業製品을 主로 輸出하는데 注力해야한다. 이 경우 輸出商品의 構成은 점차 農水産物 爲主로 부터 工業製品爲主로

- ① 基本的諸條件
- ② 高度成長
- ③ 高投資率과 高貯蓄率
- ④ 安定과厚生
- ⑤ 工業化와 農業問題
- ⑥ 工業化의 形態
- ⑦ 輸出增大와 輸出産業

重點을 옮겨야한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나 輸出産業으로서 흔히 지목되는 것은 勞動節約的인 産業 또는 先進國에서 斜陽化된 産業이다. 賃金率이 높은 先進國에서는 斜陽産業이지만 賃金率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로써는 先進國보다 有利한 競爭力을 확보할 수 있다는 理由때문이다.

⑧ 工業化를 위해서는 農業開發이 必要하다고 力說되기도 한다. 工業化를 위한 食糧및 原料의 供給市場으로서 그리고 工業生産物의 販賣市場擴大를 위해서다. 그러나 이는 前記한 ④의 命題때문에 副次的인 意義밖에 지나지 못하는 것 같다. 現實的으로 우리나라 工業은 國內農業에 依存한다기 보다 外國에 더욱 依存하는 傾向을 보여 준다.

물론 한국경제의 發展方向에 대해서는 이밖에 여러가지 表現으로 條件을 말할수 있을 것이 실지로 여러가지 異論이 있을수 있을 것이. 그러나 여기서는 一般的으로 흔히 論議되는 上과 같은 몇가지만을 吟味의 對象으로 삼기 한다. 한국경제의 將來를 어떠한 方向으로 開시시켜야 하는가는 대체로 이상과 같은 몇가지를 검토함으로써 基本的인 윤곽을 잡을수 있을 않을까 볼수있기 때문이다.

高度成長

첫째로 문제가 되는것은 經濟發展의 尺度구실하는 成長率에 관한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速한 經濟發展을 달성하기 위해 高度成長을 룩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높은 成長率을 곧 急速한 經濟發展으로 規定하기 일쑤다. 經濟政策局도 거의 例外없이 그렇게만 보는것 같다. 연 언젠나 덮어놓고 그렇게만 보아도 좋을 것이 經濟的으로 말해 高度成長이 곧 急速한 經濟發展을 뜻하는것은 長期的으로 높은 經濟成長率 유지될때에 限해서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드시 그렇다고만 볼수없다. 短期的으로 높은 經濟成長率의 유지가 곧 그만큼 急速한 經濟成長을 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

라 短期的으로는 낮은 經濟成長率이 높은 經濟成長率보다도 長期的인 經濟發展을 위해 必要하고 바람직할 때가 있다고 할것이다.

그까닭은 무엇보다도 같은 크기의 資本으로서도 資本係數가 낮고 投資의 懷妊期間이 짧은 部門에 投資하면 所得發生의 效果가 即效의 또는 短期的이며 經濟成長率은 높아 질수있고, 반대로 資本係數가 높고 投資의 懷妊期間이 긴 部門에 投資하면 우선 당장의 成長率은 낮으나 資本蓄積의 面에서나 産業構造 또는 生産基盤은 도리어 더욱 發展하고있다고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經濟成長率이라는 概念은 投資와 生産基盤의 強化라는 側面을 無視하고 오로지 生産의 增大만을 重視하는 傾向을 갖는것이다.

現實的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數年間に 이룩한 이른바 高度成長이 라는것도 이런뜻에서 問題가 없지않다. 최근 數年間的 높은 經濟成長은 냉정히 따져 資本集約的인 重工業이나 運輸交通部門, 電力部門에 대한 投資需要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勞動集約的·資本節約的인 部門에 대한 投資集中으로 이룩된 것이라할수 있다. 바꿔 말해 그것은 낮은 資本係數部門에의 投資集中으로 높은 經濟成長率이 이룩된 것이다. 그 結果는 産業構造와 生産基盤의 脆弱, 下部構造의 貧弱, 社會間接資本部門의 隘路등으로 經濟成長率의 長期的極大化에 지장을 초래하는 우려를 갖게하는 것이 되었다. 이런까닭으로 한국경제를 후진상태에서 빨리 「레이크·오프」 시키기 위해 強調되어야할 高度成長은 短期的인 觀點에서가 아니라 長期的인 觀點에서의 成長率極大化라야 하는것이다.

高投資率과 高貯蓄率

다음, 높은 成長率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높은 投資率과 높은 貯蓄率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서도 問題가 없지않다. 물론 높은 成長率의 實現에는 高投資率과 高貯蓄率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現實的으로 일어난고있는바와 같이 인플레이에 의한 強制貯蓄, 租稅增收의 過度·多多益善의 外資導入등으로 無理하게 強行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흔히 經濟發展을 促進시키기 위해서는 「緩慢한」인플레이政策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成長이나 安定이나 하는 問題가 論議될때 成長論者가 으레 내세우는 辯이다. 심지어는 安定論者도 이에 同調하는수가 많다. 사실 緩慢한 인플레이下에서는 資本蓄積이 有利하다. 인플레이의所得再分配的機能이 資本蓄積에 그만큼 有利하게 作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플레이의 정도가 그야말로 緩慢한 경우이고 國民의 經濟的厚生이라는 側面을 無視하고 하는 말이다. 물론 이경우 緩慢한 인플레이는 政策의으로 調整制御할수있고 또 이 정도의 인플레이下에서는 國民의 經濟的厚生이 크게 희생되지않는다는 前提 밑에서 讚美되는것이나 이것은 冷靜히 따지면 인플레이論者의 獨善의方便에 不遇하다. 그까닭은 인플레이政策은 그정도가 아무리 緩慢한 것이라하더라도 이것이 일단 시작되기만하면 것잡을수없는 것이 되고 처음에 緩慢한 인플레이는 다음段階에 더욱 甚한 인플레이를 불러 일으키기 마련이다. 後進國이나 다른나라의 經濟發展過程에서도 完만한 인플레이는 오히려 經濟活動에 有利하게 作用하였다는것은 인플레이政策의 結果로 經濟發展이 促進된것이 아니라 經濟發展의 結果, 즉 獨寡占經濟의 進展에 따라 完만한 인플레이가 結果되었다는 點을 誤解하였다고 할것이다.

資本蓄積의 또 한가지 有力한 方法으로서 強調되는 租稅收入의 增大에도 問題가 없지않다. 一般의으로 租稅收入의 增大가 資本蓄積을 위한 有力한 槓杆이 되지만 그러나 租稅收入의 增大가 그 만큼 資本蓄積의 增大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租稅收入의 增大가 곧 그대로 資本蓄積으로 實現되기 위해서는 租稅收入의 增大分이 모두 民間消費를 희생한것이고 또 投資支出로 充당되어야 한다는 條件을 충족시키야 하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現實的으로만든지 이와같은 條件이 충족되고있는 것까지는 않다. 租稅收入에 增大는 民間消費뿐만 아니라 民間投資를 크게 희생하고 또 政府의 投資支出보다 消費支出에 더욱 配分되는 傾向이 짙다. 따라서 高度成長과 高蓄積을 위한 租稅收入의 增

大에는 이와같은 前提條件의 充足이 必要하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公的金融機關에의 貯蓄增大가 곧 그만큼 社會의 貯蓄量과 投資量의 增大인양 보려는데서도 말할수 있을 것이다.

高成長率을 위한 高蓄積率과 高投資率을 實現하는 또한가지 方法으로서 덜어놓고 많은 外資導入을 피하여야 한다는데도 困難한 問題가 없지 않다. 算術的으로는 確實히 國內貯蓄率 플러스 海外貯蓄率이 總投資率과 같게 되는 것이지만 經濟現實은 반드시 그와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海外貯蓄率의 增大에는 一定한 限界가 있기 때문이다. 즉 海外貯蓄의 크기를 결정하는 外資導入과 外國援助導入에는 그以上 吸收할수없는 一定한 限界가 있기 때문이다.

그까닭으로서의 첫째 海外貯蓄만으로 完全한 產業建設이 不可能하고 반드시 一定한 比率의 內資와 結合하여 비로소 自己完結的인 單位事業投資가 成立될수있다는 點을 들수있고 여기에 더욱 外資導入을 國內產業의 保護·育成이라는 觀點에서 다물려면 外資만으로 所望스러운 投資를 行할수 있다고 생각할수없다는 點을 또한 들수있다. 이를테면 外資導入事業에도 建設勞賃, 土地購入費, 國內供給可能的의 一部建設資材費는 內資로 充當하여야 하고 또 그렇게하는 것이 國內資源의 效率的活用方法이 되는 것이며 또 百步를 양보하여 아무리 內資를 쓰지않는 方法으로써 外資를 導入하려고 하여도 最少限 土地購入費는 결국 內資로써 해결되어야 한다. 이렇듯 外資導入은 그저 많으면 많을수록 有益하다는 꿈은 깨지고 마는 법이다. 이경우 內資調達도 現金借款으로 可能하지않느냐 하는 식의 妙案이 궁리되는 형편이지만 그것은 個別事業의 問題를 國民經濟의 負擔으로 轉稼시키는데 不遇한 것이다.

安定과 厚生

흔히 經濟安定은 經濟成長과 兩立할수 없고 高度成長과 國民經濟厚生의 極大化는 擇一的인 것으로 이야기 되기도 한다. 高度成長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經濟安定과 經濟厚生의 增大를 희생시킬수밖에 없다는 主張이나 政策이 그것이

또 現實은 이와같은 主張이 優勢함이 分明
하다.

물론 이와같은 主張은 옳지 못하고 바람직하
도 않다. 첫째 經濟安定이 高度成長과 兩立될
없다는 主張의 잘못은 經濟및 國家安定이 마
經濟成長의 희생으로 이루어지고 또 高度成
은 經濟 및 物價安定을 희생으로하여 結果되
상 보는 것이지만, 결국 이는 經濟不安定과
買上昇이 所得再分配의 機能을 강조하는데 不
안 것이고 그自體가 곧 經濟成長率의 增大를
촉진한다는 이야기가 될수 없기 때문이다. 經濟
不安定의이건 安定的이건 간에, 物價가 上昇
인 安定的이던 간에 그自體는 實質의인 經濟
成長의 크기를 變動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것은 이로써 이루어지는 再分配의 結果가 장
기 貯蓄率과 投資率에 영향을 미쳐 成長率을
낮추는 것이다. 그렇다면 經濟成長率을 높이
위해서는 처음부터 資源의 誤用을 가져오는
것으로 安定을 희생시킬것이 아니라 所得分配
歪曲시키고 不平等하게 만드는것이 지름길이
라고 할것이다. 높은 成長率을 위해서도 經濟
成長을 所望스럽고 合當한 것이다.

經濟安定의 희생에 의한 高度成長이 노리는
는 所得再分配構造의 歪曲化와 不平等化에 있
는 것이지만 이를 더욱 노골적으로 말하는것이
 이른바 先成長·後分配論이다. 말하자면 經濟成
을 極大化시키기 위해서는 國民의 經濟의 厚生
된것에 돌려두자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는 國
所得의 增大, 安定的變動 및 分配의 均等化를
이루는 「피구」의 厚生原則을 기다릴것도 없이
는 目的으로 결코 바람직한 일이 될수 없으며 經
成長政策의 目的을 否定하는 일이 된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問題가 있다면 그것은 厚
層大의 基準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는 點
이다. 즉 이경우에 우리가 明白히 해야 할것은
바로 厚生の인 厚生經濟學的인 原則에 사로
인 靜態論의인 당장의 厚生增大만을 問題삼을
이 아니라 動態論의인 觀點에서도 厚生の 極
大化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點이다. 물론 이는
論的으로 이른바 適正成長經路에 관한 論議가
지만 적어도 分配構造의 歪曲化를 助長하는것
이어서는 안될것이다.

工業化와 農業問題

急速한 經濟成長을 위해서는 工業化를 서둘러
야 한다는 命題에 異論이 있을수 없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뉴지랜드와 오
스트리리아를 除外한 大部分의 나라에서도 그
러하다. 一般的으로 工業이 農業보다도 物의生
産性的의 上昇率이 빠르고 投資의 限界效率의 높
으며 所得彈力性도 커서 發展의 相對的인 速度
가 빠르기 때문이다.

더우기 우리의 경우 農業發展의 餘地는 工業
化의 餘地에 비해 매우 制限的이고 農業發展에
의하여 食糧 및 工業原料의 問題를 自給自足하
기에는 처음부터 悲觀的이다. 制限的이고 零細
한 農地面積과 農地面積과 相對的으로 過剩狀態
에 있는 人口와 勞動力의 問題를 農業開發로 해
결하기 에는 너무나 어려운 課題일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方式으로 急速한 經濟成長率을 實現
할수는 도저히 어려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國
內農業은 이를 開發하여도 國內工業을 支撐할수
있는 충분한 것이 될수있다고 바라기에도 어렵
다고 하겠다. 이런 見地에서 우리나라는 農業國
이고 무엇보다도 農業開發에 重히해야한다는 主
張은 적어도 經濟的으로나 產業的으로는 받아들
이기 어려운 이야기이다.

차라리 우리의 경우, 다른點을 度外視하고서
도 耕地面積이 狹少하고 勞動力이 相對的으로
過剩狀態에 있는만큼 工業化에 의하여 勞動力의
吸收와 活用을 꾀하는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따
라서 이는 農業이 工業을 위한 食料및 原料供給
市場으로서 그리고 工業製品의 需要市場으로서
충분히 發展되어야 工業이 發展할수있고 또 따
라서 農業發展을 工業發展의 先行條件으로 강조
하는 古典的인 資本主義化의 길과 一致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工業化는 古典的인 敎訓에 일러
주는바와 같은 封鎖的인 體制下에서의 工業化를
단순히 再現할수는 없고 對外貿易과 緊密히 關
聯되는 工業化를 追求할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문제는 적어도 經濟的으
로는 이와같은 前提 밑에서 해결되어야 할것이

다. 흔히 論議되는 農工併進政策上 그것은 이런 觀點에서 볼때 지나치게 強調할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런데도 만약 農工併進政策이 강조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農業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政策을 是正하고 農業資源의 遊休化를 없애고 農業의 相對的 落後相을 克服하려는 政策의意圖에서다. 또 사실 農工併進論이 容認되는것은 이것이 높은 經濟成長率의 條件이라기 보다 우리의 現實이 農業問題를 지나치게 等閑視하고 있다는데 그 主된 理由가 있다고 할것이고 社會的·政治的인 問題提起에 크게 砦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工業化의 型態

急速한 經濟成長率을 위한 工業化의 型態은 어떤것이여야 하는 것이 問題다. 흔히 工業化를 말하지만 그것은 매우 막연한 表現이다. 工業化라고 하지만 아무工業이나 덮어놓고 마구 세우는 方法도 있을 것이고 重工業中心의 工業化도 있을수있고 輕工業中心, 消費財工業爲主 또는 中小企業中心의 方法등 여러갈래 길이 있을수있다. 選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것은 工業化를 成功시키느냐의 與否에 直結되는 문제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그래서 우선 우리들이 생각할수 있는것은 우리에게 必要하고 有利한 工業化의 길을 걸어야만 이것이 成功할 수있다는 點이다. 우리나라 與件으로 보아 맞지않는 工業을 아무리 苛한들 그것은 헛수고가 되기 십상이므로 우리는 工業化를저두는데 앞서 무엇이 우리經濟에 必要하고 有利한것인가를 먼저 따져야 할것이다.

우선 우리는 工業化의 與件으로서 勞動力과 人口의 相對的過剩 自然資源과 工業原料의 貧弱, 資本과技術의 不足에 注目하지않을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工業化는 당연히 이와같은 點을 考慮에 넣지않을수 없다. 結論은 더욱 說明을 要할것도 없이 雇傭吸收의인 工業 즉 勞動集約的工業과 原料節約的工業(또는 附加價値率 이 높은 産業), 資本節約的産業低位技術産業에 置重한 工業化의 길이다. 말하자면 이와같은「카

테고리」에 속하는 工業이라야만 우선 當장 쉽게 成立할수있는 것이고 또 사실 우리나라 工業의 主流를 이루는 것들의 大部分은 이러한 類에 속하는 工業이라 할수있다. 과연 이는 바람직한 工業化의 길이 될수있는가, 더욱 따져야 할 點은 없는 것인가.

일핏보기에도 前述한바와 같은 形態로 工業化의 길을 選擇하게된다는 比較生産性的 原理가 作用하고 있음이 分明하다. 勞動力過剩·資本不足國에서는 資本集約的方法보다는 勞動集約的 産業이 有利하다는 등속의 論議는 無理致를 比較生産性的 原理에 論據를 두는수 밖에 없다.

따라서 前記한 結論은 比較生産의 原利가 妥當한 곳에서는 옳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같은 比較生産性的 原理가 타당한 경우는 매우 短期的인 경우지 긴 歲月에 걸친 工業化라는 動態的인 觀點에서는 맞지않는 법이다. 바꿔 말해 이와같은 比較生産性的 原理와 이를 根據로한 前記의 結論에 不過한 것이지 이로써 動態的인 比較生産性的 原理를 말하는 工業化의 길이 될수 없다. 만약 그렇지않다면 우리나라 工業化는 언제나 落後狀態에서 헤메야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될것이다.

工業化의 方向은 靜態的으로 생각할것이 아니라 動態的인 視角에서 잡아야 할것이다. 10年後 20年後에 어떠한 工業이 바람직한것인가를 생각해볼 必要가 있다. 그동안의 與件變動 이를테면 勞動力需給事情의 變化, 賃金率의 上昇, 先進國과의 競爭條件의 變動, 後進國과의 競爭激化, 技術進步등을 考慮에 넣고 問題를 따지지않을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前記한 結論은 저절로 修正되고야 말것이다.

工業化의 方向을 動態的으로 본다면 重化學工業 특히 技術集約的인 部門도 保護·育成되어야 할것이다. 當장으로는 不利하고 負擔이 무거운 것이 되겠지만 長期的으로는 이것이 바람직하다. 將來의 要素費用이 어떻게 될것이고 限界生産力이 어떻게 되리라는 展望을 세워 이問題를 더욱 追求하여야 할것이다. 政策은 아직도 이에 관한 認識이 不足하다고 하겠다.

輸出增大와 輸出産業

高度成長을 위해서는 輸出增大가 必要不可缺한가지 條件이 된다. 開發資金의 調達을 위해서도 그렇고 國內資源의 不足으로 일어나 的인 輸入需要를 充足시키기 위해서도 그러 高度成長을 지탱하기 위한 市場擴大의 條 라는 면에서도 그러하다. 輸出第一主義는 意味에서 至當한 政策課題다.

그러나 輸出增大를 어떻게 達成하느냐 하는것 問題다. 이에 여러가지 問題가 提起될것이 특히 무엇을 輸出하느냐하는 것이 중요한 가 된다고 할것이다. 바꿔 말해 輸出增大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이를 産業 으로 有效하게 뒷받침할수있는 基礎인 輸出産 確立, 또는 特化가 아쉽다. 輸出産業의 確 特化없이 輸出增大란 現實으로는 그만큼 輸出産業이 없고 또 輸出條件이 어렵다 이야기밖에 안된다.

이런 뜻에서 우리나라 輸出産業을 보면 한마디 말해 勞動集約的産業에 局限되어 있고 特化 정도는 매우 희미하다. 그것은 그야말로 低 값을 輸出하고있다는 느낌밖에 안주는 것이고, 가서 主된 輸出市場은 低賃金國이 아니라 高 國이다. 또 그러니까 이는 靜態的인 比較生 産의 原理를 그냥 追從하는것과 같고 工業化 方向을 勞動集約, 資本節約的, 資源節約的 開發로 置重해야한다는 靜態論的인 結論으 다시 되돌아간다.

輸出産業의 確立과 特化問題도 動態論的으로 해야 할것이다. 將來의 우리나라輸出産業이 한 形態로 發展되어야 國際競争에서 有利한 를 차지할수 있는가를 現時點에서도 생각해 할것이다. 과연 將來에도 우리나라는 현재와 이 農水産物이나 初步的인 工業製品으로 이루 는 勞動集約的生産物만으로 急速이 工業化 高度成長을 期할수있는 輸出의 急増이 可能 하고 樂觀視할수있을 것인가, 결코 그렇게는 할수 없다. 그러다가는 우리經濟가 永遠한 國의 狀態에 머물게 될뿐만 아니라 先發後進

國과의 競争에서도 물론 後發後進國과의 競争에 서도 不利한 立場에 서게될우려가 있다. 將來의 輸出增大를 위해서는 先進國과의 競争에서도 有利하고 다른 後進國과의 競争에서도 有利한 産業을 開發·育成할 必要가 있다.

그렇다면 輸出産業은 단순히 低賃金에 의한 勞動集約的産業으로 局限할수 없다. 그러나 그 령다고 해서 工業先進國의 경우와 같이 무턱대 고 資本集約的産業의 造成에만 熱中할수도 없 다. 技術集約的인 産業의 開發·育성이 필요한 것이다. 技術集約的産業의 開發·育성으로 우리 는 相對的으로 過剩狀態에 있는 人口와 勞動力 을 吸收할수 있고 資本節約的인 效果를 어느정 도 期할수있고 自然資源의 使用도 節約하면서 높은 附加價值率을 實現할수있으며 對外競争면 에서도 有利한 輸出産業을 確立할수 있다고 본 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潛在的으로 技術資源 이 풍부하고 新技術의 吸收力이 빠른 後進國으 로서는 이것이 工業化의 지름길이다.

그러나 물론 이와같은 形態서 輸出産業의 確 立과 工業化를 추진하는것은 결코 용이한 일 이 아니다. 당장으로는 靜態的인 比較生産性의 原理에 따르는것 보다 不利한 方法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이와같은 産業은 우선 保護·支 援의 對象이 될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角度를 달 리하여 보면 政策이 마치 意識的으로 産業의 二 重構造化를 피하는 것과같은 일이 될것이다. 그 러나 미국의 輸出商品이 資本集約的인 것이 아 니라 오히려 勞動集約的인 것이었다는 이른바 「레온티에프」의 逆說이 갖는 수수께끼를 우리 의 立場에서도 한번 생각해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